

“申 대법관 나쁜 선례될 것...지금은 5차 사법파동”

박시환 대법관 발언에 또 시끌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해 소장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의 발언이 또 다른 논쟁거리로 비화하면서 사법부를 다시 논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제 4차 사법파동의 주역 중 한명이자 진보계열로 분류되는 박 대법관은 최근 신 대법관 거취 문제로 전국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상황에 대해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처벌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대법관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상 소장판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하면서 박 대법관이 직접 ‘사법파동’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현재 박 대법관이 법원 내부 현안에 대해 사법파동이란 용어를 써가며 직접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박 대법관은 이런 과정을 나중에 의식한 듯 곧바로 법원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글을 올려 “기자와 만나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며 “한쪽 주장에 지지·동조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



신영철 대법관을 향한 소장 판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20일 오후 신 대법관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감한 시점에 부적절” vs “확대 해석이 더 문제”

광주지법 단독판사회의, 申대법관 ‘용퇴압박’ 가세

대법관의 발언 과정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민감한 시점에 대법관이 ‘사법파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을 촉발시킨 언급을 한 것은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박 대법관이 해명한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대법관의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를 특정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은 지난

19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일선 판사들의 잇단 ‘용퇴압박’에 가세했다.

광주지법 단독판사 34명 가운데 27명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시간30분동안 법원 대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개입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규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연합뉴스

내달 1~2일 제주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및 국제적 현안을 논의하

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다음달 1~2일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및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정상급 행사다. 외교통상부는 20일 “정부는 아세

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고 한·아세안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적 합의기구 구성부터...국회의원 주도 안된다”

한국지방신문협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정치권과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민적 합의 기구를 구성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유력 지방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공동 주최하고 대전일보가 주관한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절차적, 단계적 설계’ 토론회가 20일 대전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또 주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것과 지역의 특수성, 경제·문화적 효율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 개편 논의의 문제점과 대안 구상’이란 발제를 통해 “광역시와 도 자치정부를 엮어 고 중앙정부 산하의 국가지방광역

행정정을 만들거나 도지사를 국가에서 임명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으로 가겠다는 속내”라며 “이는 유엔의 지방분권 국제지침에도 어긋나며 소규모 기초정부라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늠하는 사안인 만큼 범국가적 차원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참예하게 반영할 선거구 조정은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지 말고 따로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황동주 기자>

‘신종 플루’ 亞·중남미 확산

WHO “전세계 감염자 40개국 1만여명 육박”

日·대만 등 초비상...쿠바서 4번째 환자 발생

신종플루가 아시아권 국가 등으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전세계적 바이러스 대유행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 신종플루가 간사이 지방에서 맹렬한 기세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20일 44명의 신종플루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내 감염자 수는 200명을 돌파하며 이날 오후 현재 238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오사카부와 효고현 외에 처음으로 일본 중서부 시가현 오쓰시에

사는 23세 남성이 감염자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초비상이 걸렸다.

대만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대만 질병통제센터는 최근 홍콩에 머물다 지난 18일 입국한 52세 외국인 남성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대만내 첫 감염자인 이 남성이 치료를 받은 후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반구 호주에서도 주요 도시인 시드니 거주 여성 1명과 멜버른 거주 남자 어린이가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호주내 감염자가 3

명으로 늘어났다.

남미 대륙인 콜롬비아와 칠레에서 10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미 도서국가인 쿠바 정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부모와 함께 쿠바에서 입국한 14세 캐나다인 어린이가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쿠바내 4번째 감염자인 이 어린이는 특별 병동에 격리 수용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회복 단계에 있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앞서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19일 오전 8시 현재(현지 시간) WHO에 공식으로 보고된 신종플루 감염자가 40개국 9천830명이라고 밝혀, 일본 등 최근 세계적 확산추세를 감안하면 감염자 수가 조만간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합격률 기입 없이 사정 학원만이 모두 합격까지 Know-How을 전한다! www.hanbitgpa.co.kr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수석합격 100% / 문제풀이 / 정답만 1인 1답 / 정답만 1인 1답 / 정답만 1인 1답

한빛 고시학원

TEL 02-74-0734

법원 경제부흥신의 매각 광고

매각처	매각대상	매각조건
1.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매각처: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서울지방법원 청사
2.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매각처: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서울지방법원 청사
3.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매각처: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서울지방법원 청사
4.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매각처: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서울지방법원 청사
5.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매각처: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서울지방법원 청사
6.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매각처: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서울지방법원 청사
7.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매각처: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서울지방법원 청사
8.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매각처: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서울지방법원 청사
9.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매각처: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서울지방법원 청사
10.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매각처: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청사, 서울지방법원 청사

광주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직영회